

# 김윤덕 “전북, 더이상 변방 아니다”

〈국도교통부 장관〉

### 현대차그룹 새만금 투자에 “행정절차 신속 추진중” 공공기관 2차 이전 노력·교통 인프라 확충 등 강조

“전북은 더 이상 변방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목소리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11일 전북대학교에서 개최된 ‘AI 건설·로봇 혁신센터’ 협약식을 위해 전북을 방문한 김 장관이 잠시 짬을 내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실을 찾았다.

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전북의 미래와 새만금 개발, 현대차그룹 9조 투자, 수소 산업 육성,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이재명 국민권익위원회 정부의 급박한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했다.

김 장관은 무엇보다 새만금을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9조원 새만금 투자는 단순한 공장 하나를 짓는 사업이 아니다”며 “수소산업과 로봇산업 신재생에너지, 첨단 제조업이 함께 어우러지는 미래형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국가적 프로젝트”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중국 방문을 통해 수소 도시와 수소 산업생태계 구축 사례를 직접 살펴봤다고 소개하며 “전북은 단

순히 수소를 생산하는 곳이 아니라 수소를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미래형 도시로 개발해야 더욱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가 그리는 미래의 전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수소 차가 도로를 달리고, 수소 기반 산업이 도시를 움직이며, AI와 로봇 기술이 건설 현장과 산업 현장 곳곳에서 활용되는 첨단 미래도시를 꿈꾸고 이의 실현을 위해 관련 기관 담당자들과 동분서주 하고 있었다.

김 장관은 “이제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산업과 생활 속에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북이 그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와 관련해 현재 부지 문제와 각종 행정절차가 신속히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련 기관과 신속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한 협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고 관련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 등 어려움이 많다고 밝혔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의 협의를 통해 현대차그룹이 원하는 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 나섰다”고 소개하며 “전북도민들이 그동안 수많은 부지 무산을 경험하며 느꼈던 불안감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이번에는 말이 아니라 실제 성과를 보여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토교통부와 관계 부처가 한 몸처럼 움직이며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전북 경제 발전의 핵심 과제로 금융산업 육성을 꼽았다.

그는 “전북이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산운용사와 금융기관 유치와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융이 있어야 기업이 오고 산업이 성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북 혁신도시가 단순한 공공기관 집적지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

산업의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전북이 오랫동안 꿈꿔왔던 사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이전에 노력하겠다”며 기대감을 높였다.

김 장관은 전북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새만금 철도와 국가철도망 구축은 물론 세종~전주 고속도로 건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세종과 전주가 직접 연결되면 전북은 새로운 성장축을 확보하게 된다”며 “전북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새만금 철도에 수소 철도 도입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미래형 교통체계 구축 계획도 소개했다.

최근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이 주장하는 제주와 광주·전남과의 메가시티를 통한 경제통합과 관련해서는 전북 스스로 경쟁력을 갖춘 독립적 경제권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으로 ‘5군 3특권’을 주장하며 “전북은 전북민의 강점과 가능성이 있다”며 “작지만 강한 경제권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북 발전과 관련하여 군신이 성장하면 서신이 함께 발전하고, 전주와 익산이 성장하면 춘남 남부권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만호 기자

# “전주, 심각한 재정난 직면”

### 조지훈 시장직 인수위, 재정위기 해법 찾기 본격 착수

민선 9기 조지훈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전국한 전 전북대학교 부총장)가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한 전주시의 재정 구조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위원회는 지난 9일 출범과 동시에 전주시 기획예산과로부터 재정 현황을 보고받고 전반적인 예산 구조와 재정 상태를 점검하기 시작했다.

산 절감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 인건비 일부 유예와 시간 외 근무수당 연가보상비 등 복지성 경비 축소 방안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재정난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재정혁신 특위는 이번 추경 편성계획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동안의 예산 집행 현황과 부채 규모, 재정 운용 전반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한 상태다.

특위는 전체 재정 흐름을 면밀히 분석해 구조적인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적인 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획이다.

김갑홍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전주 특별위원회가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재정혁신 특위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전주시의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조직으로, 위원회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로 꾸려졌다.

전주시가 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계획안에 따르면 현재 필요한 예산은 4,66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각종 사업을 최소화하더라도 1,468억원이 추가로 필요한 상황이다. 반면 확보 가능한 세입은 376억 원에 그쳐 1,087억원의 재원 부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전주시는 세출 구조조정과 세외수입 확대를 통해 214억원을 확보하고, 특별회계와 기금 활용에 250억원을 충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또한 지방재정 전환을 통해 최대 139억 원을 마련하고, 각종 경비 유예와 예

이만호 기자

## “도내 지자체·정치권 노동정책 마련 소극적”

### 민주노총 전북본부, 노동정책 요구안 지선 출마자 질의 결과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등 8명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1,716명의 의견을 담은 5대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자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과 각종 법 위반에 노출돼 있음에도 지자체와 정치권이 노동정책 마련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완주 산단 사태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전교육 미실시,



민주노총 전북본부 이민경 본부장 등 8명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단지 노동자 1,716명의 의견을 담은 5대 노동정책 요구안에 대한 지방선거 출마자 질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요시간제 위반 등 기초적인 노동권 계급 위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 기본 조례 제정, 노동자 참여 보장, 노동권 보장, 노동 안전망 구축, 노동복지 강화 등 5대 정책을 마련해 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질의 결과 이원택 전북도지사 당선인을 비롯한 일부 후보만 찬성 입장을 밝혔으며, 다수 후보자들은 답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산업단지는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만드는 공간”이라며 “노동자를 위한 정책이 없는 산업단지는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고 노동 친화적 정책이 실현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전북 장애인단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 제정 촉구

### 오늘 전주시청 인근서 집회

전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단체들은 지난 3월 도청 앞에서 1차 행동을 진행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승권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전북지부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신동성 전주시지회장 등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이동권보장법’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핵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저상버스 도입 의무 확대와 특별교통수단(장애인택시) 운영비 국비 지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담겨 있다.

단체들은 지난 3월 도청 앞에서 1차 행동을 진행했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활동을 벌였지만, 현재까지 관련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집회에서는 유승권 전국장애인 이동권연대 전북지부 대표의 발언을 시작으로 신동성 전주시지회장 등의 발언이 이어질 예정이다. /오상근 기자

## ‘도지사직 인수위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이동기 원광대 교수

# “전북의 미래 100년, AI·반도체 공장 유치서”

###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닌 도시의 모습 등 모두 바뀌어 인재는 가장 중요한 자산... 전북과학기술원 설립 '주목'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산하 ‘2020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난 10일 임명된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는 인터뷰 내내 여러 차례 “무거운 책임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전북은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수십 년 동안 수도권 집중과 인구 감소 산업 기반 약화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왔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났고 지역은 점차 활력을 잃어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새만금과 재생에너지, 농생명 산업, 국가식 품물러스터,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전환 시대라는 새로운 기회도 다가오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이동기 원광대학교 교수를 전북의 미래 100년 먹거리를 설계할 핵심 책임자로 선택했다.

이 위원장은 1968년 전북 익산에서 태어나 성장한 그는 남성고와 원광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중앙대학교에서 공공정책학 박사학위를 받은 뒤 공공정책을 연구하며 평생을 전북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에 헌신해 왔다.

특히 전북연구원에서 원광대 교수가 퇴직 전 20여 년 동안 근무하며 전북 발전을 위한 국가 예산 사업 발굴과 국제협력 사업 기획에 참여했다. 수많은 정부 사업을 분석하고 미래 산업을 연구하며 전북이 무엇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고민해 온 정책 전문가다.

현재는 원광대학교 교수이자 지역 혁신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정책비전센터장과 지방선거 정책 개발 TF 총괄위원을 맡아 전북의 미래 청사진을 설계해 왔다.

그에게 이번 특별위원장 임명은 단순한 직책 이상의 의미가 있다.

“전북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산업 구조를 새롭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산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모습과 교육, 연구개발, 인재 양성 체계까지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그가 강조하는 핵심 키워드는 ‘AI와 반도체’다.

이미 세계는 AI를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미국의 엔비디아와 오픈AI, 마이크로소프트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역시 AI와 반도체 산업에 전문화된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피지컬 AI를 산업체에 적용하는데 적극 노력

해 세계 3위를 달성하고자 하는 등 AI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를 미래 생존 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 더 이상 이러한 흐름을 관망할 수 없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철강과 조선 자동차 산업이 국가 경제를 이끌었습니다. 앞으로는 AI와 반도체가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게 됩니다. 전북도 이제 미래 산업의 중심에 서야 합니다.”

새롭게 디자인하는 종합 프로젝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특별위원회는 도청 공무원은 물론 14개 시군 대학, 연구기관,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20여 일밖에 안 되는 짧은 인수위원회 활동 기간 동안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실현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인재’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꼽았다.

그래서 그가 주목하는 것이 바로 전북과학기술원 설립이다.

대전의 KAIST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의 산실이 되었듯 전북에도 미래 인재를 길러낼 과학기술 교육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이 수도권으로 떠나지 않고 전북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며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역 발전입니다.”

그는 과거 대한민국 산업화 과정도 언급했다. 1960~70년대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국가적 비전을 세우고 과학

자와 기술자들을 육성하면서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다.

역사재철과 조선산업, 반도체 산업 역시 처음에는 모두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도전은 현실이 되었고 결국 대한민국을 바꾸었다.

이 위원장은 전북도 그러한 도전을 해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누군가는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는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20년 뒤 우리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최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삼성전자와 SK 등 대기업 투자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그는 자신감을 보였다.

“기업을 결국 미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합니다.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거대한 공간과 재생에너지, 좋은 물 등 공장이 들어올 좋은 입지 기반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는 특히 글로벌 AI 기업들과의 협력 가능성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대차그룹과 엔비디아 같은

세계적 기업들과 연계한 AI 데이터센터와 같은 새로운 산업 모델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꿈을 현실로 만드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다짐은 단호했다.

“전북은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지역입니다. 이제는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북의 미래 세대가 이 땅에서 꿈을 꾸고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동기 위원장이 말하는 AI와 반도체 등의 신산업이 전북에서 태동하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다가올 100년 동안 전북을 먹여 살리는 희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희망의 설계도가 그려지려는 시점을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다.

100년 뒤 역사가 오늘을 돌아볼 때, 2026년은 전북이 새로운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딛던 원년으로 기록될지도 모른다.

그 출발선에 이동기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의 2020 AI 반도체 인프라 구축 특별위원회가 서 있다.

이만호 기자